

"잠녀 육성 근거·내부 공감대 필요"

16일 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회 토론회
수익·기술 등 전수 조사 선행 '한 목소리'

등록 : 2013년 04월 16일 (화) 20:07:17 | 승인 : 2013년 04월 16일 (화) 20:09:47
최종수정 : 2013년 04월 16일 (화) 20:09:22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제주해녀, 해녀문화와 해양생태의 지속가능성 보호 정책' 토론회가 16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주 잠녀·잠녀문화'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해서는 명확한 육성 근거와 잠녀 내부 공감대 확보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제주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회 주최로 열린 '제주해녀, 해녀문화와 해양생태의 지속가능성 보호 정책' 토론회는 '잠녀'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 설정과 함께 환경 수용력 확보에 대한 요구로 뜨거웠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간 의견이 엇갈린 외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잠녀 정책 부채를 여실히 드러냈다.

주제발표에서 잠녀 보호·육성에 대한 해양생태보호구역 설정, 유네스코 등재 외에 한수품 해녀학교를 통한 후계자 양성 등의 의견이 제안되는데 반해 일부 토론자는 '정년 도입' 등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언급으로 빈축을 샀다.

특히 잠녀·잠녀문화에 대해서도 일부는 "잠녀문화로 정책 방향이 쏠리며 원형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가 하면 직업군으로 '잠수어업인'을 평가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때 양성 및 육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일치를 보지 못했다.

결국 '잠녀 육성'이라는 주제를 놓고 잠수어업인과 '해양을 중심으로 구성된 독특한 여성 문화' 아이콘인 잠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데다 육성 이유를 분명히 설정하지 못하는 등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였다.

현직 어촌계장들의 의견은 '마을어장' 관리와 잠녀 내부 공론화로 모아졌다. 지정토론에 이어 진행된 참여토론에서 어촌계장들은 "이런 논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먼저 잠녀들에게 묻는 것이 순서"라며 "잠녀양성에 있어 어촌계나 잠수회 수용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잠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어촌계장은 "정책을 만들 때 필요한 기초 조사라도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잠녀 지원 근거를 위해 현재 수입 정도와 물질 시간 등 잠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진행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행정 등의 적극성을 요구했다.

또 "행정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체감도가 떨어지는 데는 사례관리나 소통이 부족한 때문"이라며 "어장 관리 등 환경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묘 보급 등의 지원 외에 해양 보존 관리와 관련한 전문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체계적 접근을 주문했다. 고 미 기자